



주간통일정세 2014-17(2014.04.21~04.2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승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4-17

Contents

- >> I. 북한동향
 - 1. 대내동향
 - 2. 대외관계
 -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2. 주변국 관련
- >> III. 북한인권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2. 북한인권
 - 3. 탈북자
 - 4. 이산가족
 - 5. 납북자
 - 6. 국군포로
 - 7. 대북지원
 -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리모델링 마친 원산 송도원 야영소 방문(4/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준공을 앞둔 강원도 원산시 소재 송도 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방문하여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비롯한 야영소의 여러 곳을 장시간에 걸쳐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정말 마음에 든다"며 "우리의 건축술이 세계적 수준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말하며 야영소 공사를 진행한 군인과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당에서 아이들의 가슴마다 애국심을 깊이 심어줄 수 있게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실을 꾸릴 데 대해 지시했는데 야영소를 개건하면서 당의 의도가 관철됐다"고 말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의 야영소 방문에는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마원춘 당 재정경리부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리일환 당 부장과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위원장 등이 김 제1위원장을 영접함.

- **北 김정은, 공군 비행훈련 참관(4/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21일 "오중흡7연대칭호를 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부대를 찾아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조종사)대회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비행훈련을 지도했다"며 훈련 전반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22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의 비행훈련 참관에는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병호·마원춘 당 부부장 등이 동행함.

- **北, 김정은 어린 시절 사진 첫 공개(4/22,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1일 오후 8시 30분께부터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을 녹화 중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이 4~5세 때로 보이는 시절에 공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 2장과 10대 때 비행기 조종간을 잡은 뒷모습 사진을 내보냄.
 - 모란봉악단은 공연 마지막쯤 무대에 올린 여성중창 간주 부분에서 스크린을 통한 무대 배경으로 '영장의 슬하에서 흘러온 인민공군의 역사'란



제목을 넣은 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가 공군부대를 시찰하는 모습을 차례로 편집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10대 때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함.

- **北 김정은, '햇볕체육단'에 축구장 인조잔디 선물(4/23, 조선중앙방송)**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각급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소속 '햇볕체육단'에 축구장 인조잔디를 선물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2일 보도함.
 - 선물 전달식에 리일환(黨 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었으며,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여성 방사포부대 포사격 훈련 참관(4/2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강원도 안변군에 주둔한 제7보병사단 제851군부대 산하 여성 방사포구분대의 포사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훈련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정해진 사격 순서와 방법대로 진행됐으며, 김 제1위원장은 훈련에 만족을 표시하고 "포병싸움 준비를 더욱 완성하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김정은, 여성 방사포부대 포사격 훈련 참관(4/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681군부대 관하 포병구분대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포사격 훈련을 지켜보고 해당 "구분대의 싸움 준비가 잘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반미 대결전을 눈앞에 둔 지금 싸움준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며 전투 준비와 전투력 강화를 위한 과업을 제시함.
 - 김 제1위원장은 "지금 일부 지휘관들 속에서 군인들을 다른 사업에 동원시키며 훈련을 뒷자리에 놓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군인생활 개선을 위해 부업도 하고 부강조국 건설에서도 한몫해야 하지만 항상 싸움준비를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함.
- **北 김정은, 黨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주재...인사 등 논의(4/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재하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는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직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됐다"라며 이 회의에서 '조직문제(인사)'가 취급됐다고 전함.



- 특히 김 제1위원장은 "당 정치사업의 화력을 싸움준비 완성에 지향시켜 모든 부대, 구분대들이 당의 훈련제일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훈련을 생활화·습성화·체질 화함으로써 전군에 훈련 열풍이 끓어번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한편 통신은 26일 김 제1위원장이 군 창건일(4월 25일)에 즈음해 "서남해상의 주요 적(敵) 대상물 타격임무를 맡은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이날 훈련에 대만족을 표시하고 "포병들이 포를 잘 쏘는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며 포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함.
- 통신은 이날 훈련 참관에 "황병서, 리영길, 장정남을 비롯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인민군 당위원회 집행위원들, 군중·군단급 단위 지휘성원들이 동행했다"고 밝힘.

■ 김정은 동향

- 4/21,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1월8일수산사업소 시찰(4.22, 중앙통신·중앙방송)
 -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병호·마원춘 당 부부장 등이 동행
- 4/24, 김정은 黨 제1비서, 제7보병사단 제851군부대 산하 여성 방사포구분대의 포사격 훈련 참관(4.24, 중앙통신)
- 4/26, 김정은 당 제1비서, 軍 제681군부대관하 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 현지지도(4.26,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윤동현(인민무력부 부부장)이 동행하였으며, 박정천·윤영식(軍 장령들)이 영접
- 4/27, 김정은 黨 제1비서, 서남해상의 주요 적대상물 타격임무를 맡고 있는 장거리 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 지도(4.27, 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리영길, 장정남을 비롯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등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강반석 생일(김일성 母, 4.21) 122주년 즈음 4월21일 평양 철골혁명사적지 '강반석 동상과 만경대 묘'에 헌화(4.2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기남·최태복(黨 비서)·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강석주(黨 비서)·리무영(부총리)·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및 당·정권기관·근로단체·성·중앙기관 일꾼들과 인민군·평양 시내 근로자 등 참여
- 김정일 저작(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자) 발표('74.4.20)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간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빛나고 있다'며 '군대와 인민의 충실성은 김정일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의리로 이어지고 날이 갈수록 더욱 승화되고 있다'고 주장(4.23, 중앙통신·노동신문)
- 항병서에게 조선인민군 차수 칭호 수여, 4월26일 黨 중앙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결정 발표(4.28, 중앙통신)

나. 경제

- **北 당국자 "단둥 출발 중국인 자가용 관광 곧 개시"(4/21, 요녕조선문보)**
 - 평안북도 관광총국 최정호 국장은 지난 17일 단둥에서 열린 '단둥신의주 식당' 개업식에 참석해 "자가용 관광과 신의주 2일 관광을 곧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인 요녕조선문보가 21일 전함.
 - 이번에 단둥에서도 북한 자가용 관광이 허용되면 북-중 사이에 두 번째로 열리는 자가용 관광코스로 최 국장은 "평안북도와 단둥국제여행사가 700만 달러를 투자한 동림폭포 주변의 동림리조트가 오는 6월 개업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해 압록강변의 신의주에서 동남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평안북도 동림군 일대가 자가용 관광코스로 유력시된다고 신문은 전함.
-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14개국 290개 기업 참가"(4/22, 조선신보)**
 - 북한이 내달 12~15일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를 연다고 조선신보가 22일 보도함.
 - 조선신보는 올해 14개국에서 290여개 기업이 참가 의향을 밝혀 작년 12개국 140여 개보다 크게 늘었다며 "서방 언론들의 악선전과 달리 급속도로 장성하는 조선 경제에 대한 해외 경제인들의 기대는 커지고 있다"고 전함.
 - 또한 이번 전람회에는 기계, 금속, 전기, 건설, 광산, 에너지, 환경보호, 운송 등에 관한 상품과 기술이 출품될 것으로 전함.



- **北 박봉주 내각총리,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시찰(4/22, 조선중앙통신)**
 - 박봉주 내각총리가 평안남도 순천지구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박 총리 주재로 현장에서 열린 협의회에서는 각지 건설장들에 더 많은 시멘트를 보급하기 위해 설비를 완전가동하고 관련 단위에서 생산에 필요한 전기와 원료를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고 전함.

- **스웨덴 적십자사, 대북 지원사업에 50만유로 제공(4/24, 미국의소리(VOA))**
 - 스웨덴 적십자사가 북한 평안남도 지역의 재난 극복 및 영양상태 개선 사업을 위해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에 50만 유로(약 7억2천만 원)를 제공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4일 전함.
 - IFRC와 스웨덴 적십자사는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3년간 평안남도 북창군과 은산군 지역에서 재난관리와 식량안보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재난 극복을 돕고 영양상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지린성, 북한에 '백두산 자가용 관광' 제안(4/24, 연합뉴스)**
 - 중국 국가여유국(관광국)정보센터 지린성 여유국 자오샤오쥘(趙曉君) 국장이 지난 16일 지린성 창춘(長春)에서 북한 국가관광총국 리응철 관광지도국장을 만나 지린성 창바이(長白)현과 안투(安圖)현에서 각각 출발하는 두 갈래의 백두산 자가용 관광코스 개통을 제안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중국 투먼-북한 온성 '자전거 관광' 내달 2일 개시(4/26, 연변정보항(延邊信息港);연합뉴스)**
 - 중국 지린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門)시에서 출발하는 중국인 대상 '북한 자전거 1일 관광'이 다음 달 2일 시작된다고 연변정보항(延邊信息港)이 26일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중은 그동안 운영해온 투먼과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를 잇는 도보 관광코스에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자전거 관광코스를 마련했으며, 관광객들은 자전거를 타고 인솔자와 함께 투먼 출입국사무소를 거쳐 두만강의 교량을 건너 뒤 남양 기차역, 향미원조열사기념비, 김일성주석 동상, 시장 등을 둘러보고 북한 측이 준비한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고 뉴스는 전함.

- **北 1~3월 중국산 곡물수입, 작년 절반으로 감소(4/27, 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1분기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이 작년의 절반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27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1~3월 중국에서 들 여온 곡물은 밀가루 2만3천636t, 쌀 1천241t, 옥수수 1천192t 등 모두 2만6천263t으로 이는 북한이 작년 같은 기간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 5 만4천178t의 48%에 불과하고, 2012년 4만1천156t과 비교해도 40% 가 까이 낮은 수치임.
- 또 1분기 북한의 중국산 곡물 수입액은 1천193만 달러(약 124억원)로 작년 2천471만 달러(약 257억)에서 52% 줄었다고 뉴스는 전함.
- 한편 세계식량계획(WFP)은 작년 11월 북한의 '2013~2014 양곡연도 '(2013년 11월~2014년 10월) 곡물 생산량을 503만t(도정 후 기준)으로 전년보다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중국 단둥시 "자가용 북한관광 6월 개시 추진"(4.22, 중국신문사)
- 제29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막식, 4월 23일 최태복(당중앙위 비서) 등이 참가한 가운데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4.23,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사할린, 무역경제협조 의정서 조인(4.24, 조선중앙통신)

다. 군사

● 北, 건군절 맞아 軍의 '수령결사옹위' 강조(4/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인민군 창건 82주년인 25일 1면 사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수뇌부 옹위의 제일결사대"라며 "오늘도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 사수, 수령 보위의 전초선에 서 있다"고 밝힘.
- 신문은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원수들은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며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수뇌부 옹위전"이라고 강조하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은 혁명무력 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 담보"라며 군이 '김정은 결사옹위의 전위대'가 돼야 한다고 역설함.

● 北 주민, 건군절 맞아 군부대 위문(4/25,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창건 82주년을 맞아 주민 대표단이 군부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통신은 군인들이 부대를 방문한 주민 대표단들을 반갑게 맞았으며,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보내는 선물도 전달됐다고 전함.



● 北, 김정일군사연구원 준공(4/26,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창건 82주년인 25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정일군사연구원이 개축 작업을 마치고 준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함.
-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은 준공사에서 "군사연구원이 군사 지휘관 양성의 최고전당으로 전변된 것은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며 "(연구원에서) 뜻과 정을 같이하는 의리의 인간, 김일-김정일전략전술과 영웅적 투쟁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싸움꾼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라고 강조함.

■ 기타 (대내 군사)

- 北 인민군 창건 82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4.25, 조선중앙TV)
- 김영남 · 박봉주를 비롯한 당 · 정 · 군 간부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25, 중앙방송)
- 김영남 · 박봉주 · 장정남을 비롯한 당 · 정 · 군 간부들, 4월 25일 대성산혁명열사능과 애국열사능 ·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에 헌화(4.25, 중앙통신 · 중앙방송)

라. 사회·문화

● 北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약' 개발자 홍원태 사망(4/21,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안북도) 정주 기금생물약품연구소 연구사 홍원태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19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함.
-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홍 박사는 2005년 북한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예방약을 개발해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전해짐.

● "北, AI로 닭 11만마리 소각·매몰"(4/22, 조선신보)

- 북한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으로 4월 5일 기준 약 11만 마리의 닭이 소각되거나 매몰됐다고 조선신보가 22일 평양발로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AI가 발생한 평양 하당 닭공장과 서포 닭공장에서 각각 8만 4천900여 마리와 2만 3천550여 마리의 닭이 소각·매몰됐다고 전함.

● "美 민간단체 건립 지원 평양결핵연수원 내달 개원"(4/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민간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건립을 지원해온 북한의 평



양 결핵연수원이 다음 달 5월 완공돼 첫 교육에 들어간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22일 전함.

- 이 단체는 현재 결핵연수원 공사가 약 95% 진행돼 막바지 작업을 남겨 둔 상태라며 내달 중순 방북해 중국에서 주문한 책상과 의자 등의 가구를 결핵연수원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힘.

● "北 조류인플루엔자 황해북도로 확산"(4/23, 미국의소리(VOA))

- 북한은 지난 22일 리경균 농업성 국장 명의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 황해북도 황주군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전함.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황주군 룡궁리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AI로 닭과 거위 501마리가 감염됐으며 이 중 136마리가 폐사하고 365마리는 매몰시킴.
- 북한 당국은 AI 발병 지역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소독 작업을 진행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나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치료하지는 않고 있다고 VOA가 설명함.

● "1~3월 중국 방문 北 주민 약 6% 감소"(4/23,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1분기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 국가여유국 통계를 인용해 23일 보도함.
- RFA는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2011년 15만2천300명, 2012년 18만600명, 2013년 20만6천600명으로 빠르게 증가해왔다며 지난 1분기 방문객이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함.
- 지난 1분기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가운데 취업 목적의 방문자는 2만900명으로, 48.4%, 회의·사업, 여행·관광 목적의 방문자는 각각 8천600명(19.9%), 400명(0.9%) 성별로는 남자가 3만4천600명으로 80.1%에 달한 것으로 전함.

● "北주민 영양상태·정보화 수준 세계 최저"(4/2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와 정보화 수준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세계은행이 최근 공개한 '2014년 세계발전지표' 보고서를 인용해 전함.
-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최근 3년 연속 5%씩 증가했지만, 식량부족 상태는 여전한 것으로 북한 주민 3명 중 1명은 건강 유지를 위한 영양분 섭취를 하지 못한다고 RFA는 전함.
- 또 북한 주민의 휴대전화 보유 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7%에 불과해 동아시아지역 평균 수치인 89%에 비해 매우 뒤떨어졌으며 세계은행이 집계한 200여 개국 중 개인의 인터넷 접속을 완전히 통제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한 것으로 전함.



● 北 말라리아 감염자 2년 연속 증가(4/26, 미국의소리(VOA))

- WHO가 최근 발표한 '2013년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북한에서 확인된 말라리아 감염자는 2만 1천850명으로 이는 2011년 1만 6천760명보다 5천90명 늘어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함.
- 북한에서는 1970년대 말라리아가 없어졌다가 1998년 2천명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확산했다가 2001년 11만 5천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2007년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WHO는 2007년 북한을 '말라리아 퇴치 전 단계' 국가로 분류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평양시를 훌륭히 꾸리는 것은 선군조선의 존엄과 권위와 잇닿아있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며 '모든 평양시민들이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노력으로 당의 문명국건설 구상을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4.22,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일성종합대학, 체육선수들의 훈련에 도움을 주는 기재와 프로그램 개발 선전(4.22, 중앙통신)
- 제29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막식, 4월 23일 최태복(당중앙위 비서) 등이 참가한 가운데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4.23, 중앙통신·중앙방송)
-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2차 경기(4.25~5월중순), 김일성경기장과 서산축구경기장에서 진행(4.25, 중앙방송)
- 정인순 선수, '2014 아시아 레슬링 선수권대회'(4.23~27, 카자흐스탄) 여자레슬링 55kg경기에서 금메달 획득(4.26, 중앙통신·중앙방송)
- 로영명(男, 청소년 B급)·로향미(女, 청소년 A급)·김은향(女, 청소년 B급) 선수, 2014년 국제빙상동맹발전컵 피겨경기대회(4.26, 필리핀) 개인경기에서 각각 금메달 쟁취(4.27, 중앙통신·중앙방송)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오바마 아시아 순방 앞두고 '뽀 중시전략' 비난(4/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담화를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을 맹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오바마의 이번 행각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



실행의 일환으로서 가뜰이나 불안한 이 지역에 대결과 핵 군비경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위협천만한 행보"로 "미국이 유라시아대륙의 큰 나라들의 반발을 막으려고 우리의 '핵·미사일위협', 그 무슨 '도발'을 구실로 내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한 그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자위적 억제력을 다지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공화국의 정책적 입장"이라고 밝힘.

● **北 신문 "美, TPP로 아태지역 경제적 지배 노려"(4/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협상마당에 떠도는 알뜰(알력)과 대결 기운'이라는 글에서 최근 TPP 체결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무리하게 시장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난함.
- 신문은 이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저들의 상품시장으로, 자본투하지로 전변시키며 나아가 지역경제를 미국 독점자본에 복무하는 하나의 부속물로 만들자는 것, 이것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이 노리는 목적"이라고 지적함.

● **"北, 작년 유엔 투표서 미국에 최다 반대"(4/21, 자유아시아방송(RFA))**

- 2013년 유엔에서 미국과 다른 의견을 가장 많이 낸 국가는 북한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전함.
- 미국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3년 유엔 투표 보고서'에서 작년 유엔 총회에서 진행된 84차례 투표에서 북한은 52차례 미국과 다른 의견을 표시, 유엔 회원국 192개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힘.
- 북한은 미국 정부와 직접 연관된 안건 11건 중 미국의 쿠바 경제봉쇄, 시리아 인권 등 7건에서 미국과 반대쪽으로 투표했고 무기거래협약, 군비 투명성 등 4건의 안건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기권했다고 RFA는 설명함.

● **北,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유치는 "체제대결 선전포고"(4/21,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1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 문제와 관련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체제 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힘.
- 조평통 대변인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는 "우리를 반대하는 인권모략의 국제적 거점을 저들 땅에 만들어놓고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이며 특히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직접 겨냥한 극악한 도발 광란을 일층 강화해보려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우리 사회주의 제도와 인민의 존엄을 함부로 건드리는 데 대해 우리 천만 군민은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함.



- **北,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는 "반인권 범죄자" 비난(4/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논평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커비 위원장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개입과 가해자들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한 것을 거론하며 "커비 패당이야말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 의도적으로 자주적인 주권국가의 영상(이미지)을 훼손시킨 최악만으로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충분한 극악한 반인권범죄자들"이라고 밝힘.
 - 통신은 커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불순하고도 위협천만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며 COI가 지난 2월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도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인간추물들의 비열한 조작품"이라 비난함.

- **北 "미국인 관광객 1명 억류" 발표(4/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밤 발표한 '보도'에서 "해당 기관에서는 지난 10일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면서 입국 검사과정에 망동을 부린 미국 공민 밀러 매슈 토드를 억류했다"고 전함.
 - 이어 "그는 입국 과정에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서 합법적으로 발급한 관광증을 찢어버리면서 '망명을 하겠다', '피난처로 정하고 왔다'고 고아대며(떠들어대며) 우리의 법질서를 난폭하게 위반했다"고 소개함.

- **北 "美 대북압박 수위 높이면 더 강력한 자위적 조치"(4/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 얼마 전에 전부 끝났다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계속 높인다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자위적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신문은 27일 '힘의 정책으로 얻을 것은 수치와 파멸뿐'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박근혜 일당도 미국의 주변을 맴돌면서 동족 상쟁의 비극을 몰아오려고 날뛰는 것이 머저리 짓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이것이 강조함.

- **北, 한미정상회담 원색 비난..."남북관계 더 기대안해"(4/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박근혜는 오바마를 만나 우리 핵과 병진노선,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시비질하면서 온갖 악담을 다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성명은 "박근혜는 이번 행실로 북남화해에 기초한 평화통일이냐, 체제대결에 의한 전쟁이냐 하는 우리의 물음에 전쟁으로 대답했다"고 주장하고, "박근혜에게는 이제 다른 약이 없다"며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등지를 틀고있는 한 북남관계에서 그 무엇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함.



- 성명은 박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발언에 대해 "북남 전면대결을 선언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라며 "박근혜는 이번에 반통일의 길, 반평화의 길, 대결과 전쟁의 길을 택한 것으로 하여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4월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태양절 경축' 재일본조선인 대표단 면담(4.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노동당 대표단(단장 : 리창근 黨 부부장), 4월21일 방글라데시 노동당 제9차 대회 참석차 평양 출발(4.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영국 레이버당 출신 국회 상원 의원 '네일 포비스 데이비드슨'과 일행, 4월21일 평양 도착(4.21,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사할린주 정부대표단(단장:가흐 엘레나 니콜라예브나 경제발전성 부상), 4월21일 평양 도착(4.2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4월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그리스 대사의 신임장 접수 및 담화(4.22, 중앙통신·평양방송)
- 철도협조기구위원회 대표단(단장: 쇼스다 타데우스위원장)과 폴란드 철도대표단, 4월 22일 철도협조기구 제29차 총사장 회의에 참가차 평양 도착(4.22, 중앙통신·중앙방송)
- 駐北 팔레스타인 대사, 4월 22일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4.22, 중앙통신)
 - 최태복(黨 비서), 태형철(교육위 고등교육상), 현상주(「직총」 중앙위원장) 등 초대
- 영국 레이버당 출신 국회 상원의원 일행, 4월 22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22,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국무부가 일본이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폐지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것과 관련 '일본의 군국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무모한 처사'라며 '일본을 돌격대로 하여 아시아 지배야망을 실현하려는 범죄적 책동은 국제적인 규탄·배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4.23, 중앙통신·노동신문)
- 중국 국가관광국 친선참관단(단장: 두일력 부국장), 4월 25일 평양에 도착하여 만수대언덕 김 아버지 동상에 헌화(4.25,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국무부의 '北 인권, 민주주의 증진 사업 공개모집' 및 선정단체 35만US\$ 지원에 대해 '우리(北)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 앞에 공포를 느낀 미국의 대북 인권 모략책동의 보다 노골적인 단계'라며 '쓰레기 단체들을 내몰아 우리 내부를 꺼꾸러뜨리려는 미국의 추악한 속심'이라고 비난(4.26, 중앙통신)
- 철도협조기구 제29차 총사장회의, 4월24일~27일 평양에서 진행 및 '2013년도 화물·여객수송 등 철도협조기구위원회의 사업정형에 대한 총화 및 의정서' 채택(4.27, 중앙통신·중앙방송)



나. 6자회담(북핵)

- "北풍계리 핵실험장 가림막 설치·차량움직임 증가"(4/21, 연합뉴스)

 -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가림막 설치 등의 특이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연합뉴스는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1일 "풍계리 핵실험장의 특정 갱도에 가림막으로 보이는 물체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며 또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 최근 들어 차량의 움직임이 몇 달 전보다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고 일부 장비와 자재 반입 활동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함.

- 유엔 핵실험금지지구 "北 징후 상시 감시"(4/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 속에서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가 북한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전함.
 - 토머스 뮌젤부르크 CTBT 대변인은 RFA에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에 보고하는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북한과 가까운 중국의 관측소를 최근에 새로 가동한 것을 비롯해 전 세계 300개가 넘는 관측 시설에서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힘.

- 박대통령, 시진핑과 통화…'北핵실험 중단' 설득 요청(4/23,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40여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의 잦은 핵실험 징후 등 유동적인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는 박 대통령이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와 추가 핵실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독일 국민방문시 제안한 '드레스덴 선언'을 시 주석에게 설명하고 "중국은 북한 무역의 90%와 경제지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이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함.
 -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정세에서 긴장 고조를 막는 것은 한중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측간(관계 당사국간) 대화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북한의 핵보유 반대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이 서로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으며 특히 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며 한반도 자주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통신 "핵·경제 병진노선 관철 막을 자 없다"(4/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조선노동당 병진노선의 승리를 담보해주는 사상



의 힘'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을 관철하는 길이 자주와 평화, 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한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자는 이 세상에 없다"며 "사상의 힘이 떠밀고 있는 이 대진군의 최후 승리는 필연적"이라고 밝힘.

- 통신은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입만 벌리면 조선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병진노선)을 걸고들며 그 무슨 '핵포기'와 '민생'에 대해 악랄하게 떠들어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병진노선의 관철은 남들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제국주의와의 사생결단의 대결전"이라며 "한번 선택한 이 진리의 길을 조선은 추호의 동요 없이 가고 있다"고 강조함.

● 조선신보 "북핵실험설은 南 당국의 위기수습책"(4/2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4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민심의 분노'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남조선에서는 당국이 내돌리는 '북핵실험설'도 '대북정보'라는 것이 첨부돼 언론을 통해 확산됐는데 이는 사람들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고식적인 위기수습책의 하나"라고 주장함.

■ 기타 (북핵)

- 韓美 '통합 국방협의체(KIDD)' 회의 진행(4.15~16, 美 워싱턴DC 펜타곤) 및 '맞춤형 억제전략'의 구체적 이행방안 논의 등 관련 '북침 핵전쟁 도발책동을 강화하기 위한 상전과 주구의 범죄적 모의'라고 비난하며 '미사일발사훈련과 핵시험 예고는 자위적 대응조치'라고 정당성 주장(4.22, 중앙통신 · 민주조선)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매체, 한미훈련 후 한반도 정세 변화설은 "궤변"(4/21,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0일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종료되고 나서 북한이 대화 분위기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남한에서 나온다고 하며 이를 "사태의 본질과 초보적인 현실감각마저 결여된 파렴치한 궤변"이라고 지적함.
- 논평은 이어 "괴뢰패당이 외세에 추종하여 감행하는 동족 암살과 모략 소동이 사라지지 않는 한 조선반도 정세는 언제 가도 안정될 수 없고 북남 사이의 현 상황도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北, 차대통령에 공개질문장... "평화통일이나 전쟁이냐"(4/23,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을 발표하고 오는 8월 예정된 한미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 용의가 있는지, 5·24조치 철회 생각이 있는지, 서해 평화수역 조성 의향이 있는지 등 10개 질문에 박 대통령이 대답할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박 대통령이 진실로 북남 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입장이라면 "북측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해야 한다"면서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함.

- **北 "기존 합의부터 이행하라"...드레스덴 선언 비난(4/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겨레의 통일 지향을 우롱하는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집권자는 통일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민족 공동의 통일 대강부터 잘 알아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대로만 한다면 북남관계 개선의 넓은 길이 열리게 된다"고 전함.
 - 신문은 드레스덴 선언이 인도적 문제의 우선적 해결과 북한 산모와 유아에 대한 영양 지원 등을 제시한 것이 "북남관계 문제에 대한 알짜 무식쟁이의 잠꼬대 같은 수작"이라며 "북남관계 개선의 근본 문제는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임을 강조함.

- **정부 "北 공개질문장, 기존입장 반복...대응필요 없어"(4/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4일 통일부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전날 보낸 공개질문장에 대해 "기존 북한 입장을 반복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北, 무인기 사건 또 비난... "천안함 복사판"(4/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내외의 조소를 자아낸 유치한 모략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얼마 전 괴뢰들이 들고 나온 무인기 사건의 '복소행실'이야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다"며 "동족대결모략극인 천안호 사건의 복사판"이라고 주장함.
 - 이어 신문은 무인기가 북한산이라는 근거로 국방부가 제시한 군사시설 촬영 사진, 북한말 '기용날자' 등은 엉터리라며 "괴뢰패당은 사건을 조선반도의 긴장 상태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고 반공화국 대결소동을 한층 강화하는데 적극 써먹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에게 북남관계 파국의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보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함.



- **北어업지도선 2척 서해NLL 침범...경고사격받고 돌아가(4/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5일 "어선을 단속하는 북한 단속정 2척이 오늘 새벽 4시35분부터 차례로 서해 NLL 소청도 부근 해역을 1노티컬마일(1.8km) 침범했다가 5시3분께 돌아갔다"고 합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합참 관계자는 "우리 해군 함정은 단속정이 NLL 남쪽으로 내려오기 직전부터 '내려오지 마라'고 경고통신을 6회 실시했고, 계속 남하하자 76mm 함포로 경고사격을 한 차례 실시했다"고 밝혔으며 북한 단속정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에 놀라 이내 북쪽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자위권 포기 안해...적대세력 도전엔 초강경 대응"(4/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정부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하고 미국, 일본과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자주적 권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26일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당당한 자위적 권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자주적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세력의 도전엔 초강경으로 단호히 맞받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거론한 외무성 성명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불순한 목적 밑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것을 구실로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조건에서 우리가 그것을 맞받아나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매체, '좌파 발언' 한기호 비난(4/22,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2일 '때아닌 중북 소동, 응당한 귀결'이라는 글에서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쓴 데 대해 "그야말로 새로운 중북소동, 현대판 매카시즘 광기의 발로"라고 주장함.

- **北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南 설치는 용납 못 할 도전"(4/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정세 파국을 몰아오는 분별없는 망동'이라는 글에서 "남조선 당국의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 놀음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 할 도전이며 북남관계를 더욱 엄중한 사태로 몰아가는 극도의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함.



- **北 "세월호 침몰 사고에 심심한 위로"(4/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이 23일 4시께 관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강수린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위로의 뜻이 담긴 전통문을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전달해 왔다고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통일부, 어린이 의약품 대북지원 승인(4/24, 연합뉴스)**
 - 통일부가 민간단체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대북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했음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함.
 - 연합뉴스는 이 단체가 해열제와 진통제, 감기약, 수액 등 의약품 7천 500만원어치를 평양의 어린이 병원에 보낼 계획이라고 전함.
 - 이에 따라 올들어 정부가 승인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총액 기준)은 20억2천500만원 규모로 늘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北, 南 민간단체에도 위로 전문(4/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5일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24일 팩스로 남측 민화협 앞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밝힌 전문을 보내 왔다고 보도함.
 - 북측 민화협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많은 승객이 참사를 당했다는 비통한 소식을 접하여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라며 "피해 유가족들의 슬픔이 하루빨리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힘.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도 24일 6·15 남측위원회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앞으로 각각 팩스를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뉴스는 전함.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전면 가동' 본격 추진(4/27, 연합뉴스)**
 - 정부가 무선인식(RFID) 기술을 활용한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의 본격 가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일단위 상시 통행을 위한 통행 분야 실무접촉을 제의하는 통지문을 지난 22일 북측에 전했다"고 밝힘.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전문가 "北 핵실험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대응"(4/24, 연합뉴스)**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선임연구원과 잭 쿠퍼 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은 플루토늄 방식과 우라늄 농축 방식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플루토늄 방식의 경우에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핵무기의 소형화가 가능함을 의미하며, 우라늄 농축 방식일 경우에는 핵 비확산 체제에서 핵심 우려물질로 평가되는 고농축우라늄(HEU)을 은밀하게 다량 확보하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음.
 - 이는 CNN에 기고한 '북한의 핵무기를 좌절시킬 3가지 방안'이라는 글에서 나온 것으로, 두 사람은 '북한의 핵 관련 물질 수입 및 대외 반출 금지 압박',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제공하는 확고한 핵 억지력 과시'의 3가지를 제안했음.

- **한미정상, 北핵위협 가능성에 '옐로 카드'(4/25, 연합뉴스)**
 - 한미 정상은 25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등의 발언을 통해 양국간 강력한 공조를 통해 분명한 대북 경고메시지를 보내는데 방점을 찍었음.
 - 또한 두 정상은 경호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한미연합사 동반 방문을 공개했는데, 이는 한미연합사 창설 최초이며 한미동맹의 역지력을 직접 확인하고 일종의 북한에 대한 한미연합 방위력을 과시하려는 '시위로 볼 수 있음.
 - 반면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양 정상 모두 부정적 뉘앙스를 풍겼는데, 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보다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데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됨.

나. 미·북 관계

- **美 "北핵실험장 동향 예의주시...도발 삼가야"(4/23, 연합뉴스)**
 -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아시아 4개국 순방 관련 대통령 전용기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동향을 매우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추가 도발을 삼가라고 요



구했음.

- 이는 기자들의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 주변에서의 이상 동향 징후 포착 관련 질문에 대한 것으로, 이어 "북한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국제 의무의 준수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 또한 "북한이 취하는 어떤 행동도 과거 수차례 그랬듯 준수 의무 위반일 공산이 크고, 이는 일종의 순환적 성격을 띠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순방일정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정을 전제로 추측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음.

● 38노스 "오바마 방한때 北 핵실험할 것 같지 않아"(4/23, 연합뉴스)

-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22일, 지난 3월초부터 19일까지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에서의 이상 활동이 부쩍 증가하고 있으나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 38노스는 "핵실험장 남쪽 갯도에서 4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관측되는 만큼 이 지역에서의 많은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으나 3차 핵실험 강행 이전에 포착됐던 것처럼 차량, 인력, 장비와 관련한 높은 활동 강도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 현재 관측되고 있는 활동들은 핵실험 준비 초기단계이거나 겨울이 지나 시설과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다만 상업위성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만큼 정확한 분석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음.

다. 중북 관계

● 中, 대북 경제제재 해도 北비핵화 불가능<中학자>(4/22, 연합뉴스)

- 국제정치학자인 연쉐퉁(閻學通) 칭화대 교수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북한을 경제제재하면 북한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외교 비전문가의 소견이다"라고 밝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했음.
- 그는 "6자 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며, 북한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양국의 정상회담도 없었기 때문에 북한에의 영향력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 또한, 북한이 4차 핵실험 강행 시 "중국은 분노와 불만을 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10년 후에는 한중이 공통의 이해가 많아져 한중 관계를 북한이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1~3월 중국 방문 北 주민 약 6% 감소(美방송)(4/23, 연합뉴스)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중국의 국가여유국 통계를 인용해 올해 1분기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 가까이 감소(4만5천800명 → 4만3천200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음.
 - 중국 방문 북한 주민은 2011년 15만2천300명, 2012년 18만600명, 2013년 20만6천600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는데 지난 1분기 방문객의 감소는 이례적이라고 평가, 이는 작년 말 장성택 처형 이후 냉랭해진 중북 관계를 반영할 것일 수 있다고 관측함.

라. 일북 관계

- 日납치대책본부장 몽골 방문... "납치문제 협조 구하러"(4/24, 연합뉴스)
 - 산케이(産經)신문은 24일,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의 납치문제대책본부 전직 사무국장 미타니 히데시(三谷秀史)와 현 사무국장 이시가와 요이치로(石川正一郎)가 몽골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음.
 - 신문에 따르면 전·현직 사무국장이 몽골을 방문한 것은 몽골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움직이기 때문에 몽골 대통령 측근 등을 만나 협조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 분석했음.
 - 또한 최근 납북 피해자의 대표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의 부모가 몽골에서 메구미의 딸 김은경 씨와 면회하는 등의 과정에서 일본의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사실상 배제되는 등 이 문제와 관련해 외무성에 주도권을 뺏긴 점도 배경이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마. 기타

- 유엔 핵실험금지기구 "北 징후 상시 감시"(4/21, 연합뉴스)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전 세계 300개가 넘는 관측 시설에서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감시하고 있으며 핵실험 징후 포착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에 보고하는 감시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고 전했다.
 -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 속에 토머스 뮌젤부르크 CTBTO 대변인은 지진파, 수증음파, 초저주파, 핵물질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한 최고 수준의 핵실험 감시체계를 가동, 24시간 상시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CTBTO는 유엔이 핵실험을 막고자 1996년에 만든 핵실험 감시기구로, 주요국의 전직 총리 등으로 구성된 CTBTO 산하의 '저명인사 자문단'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스웨덴에서 회의를 열고 핵실험 금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논의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정상, 전작권 재연기 공감...전환시점 주목(4/25, 연합뉴스)**
 - 한미 정상은 25일,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사실상 공감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전작권을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지속적 협의를 통해 10월 경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음.
 - 한국군의 킬체인(Kill Chain),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시기 등이 전환시점 결정의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작권 전환시점을 정하더라도 전환 2년 전부터 북한의 위협과 한국군 능력 재평가를 통해 실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양국 정상은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중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그동안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와 관련 유보적이고 신중했던 것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될 것이라 관측됐음.
 - 지난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으나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체결 당일 무산된 바 있고,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합의 대가로 우리 정부가 3국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에 사실상 동의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음.
- **한미정상, 연합사 첫 공동방문 "北도발 단호대처"(4/26,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오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최초로 서울 용산의 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대북 억지력을 직접 재확인했음.
 - 두 정상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고, "북한의 도발시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처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음.
 - 양국 정상의 연합사 방문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예고에 대해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력과 대북 공조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됨.

나. 한중 관계

- **차대통령, 시진핑과 통화...'北핵실험 중단' 설득요청 (4/23,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조짐이 뚜렷해진 상황에서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의 잦은 핵실험 징후 등 유동적인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음.
 - 박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역내에서의 군비 경쟁과 핵 도미노 현상을 자극해 안보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



세스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표명과 함께 중국의 대(對) 북한 설득 노력에 감사를 표했음.

- 이에 시 주석은 "북한의 핵보유 반대는 물론이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화를 막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한반도 자주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음.
- 한편, 이번 전화통화는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펴고 있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꾀하려는 차원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음.

다. 한일 관계

● 日, "한국 동의 없는 집단자위권 행사 안 한다" 전해와(4/21, 연합뉴스)

- 20일,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7~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DIT)에서 일본 측이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 정부는 토의에서 "한국의 국익 및 안보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한반도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으며, 일본이 외교협의를 통해 관련 입장을 공식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와 관련 일본에서는 5월 중으로 집단자위권 행사 방안 관련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며, 그동안 한국 내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 것을 명분으로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음.

● 日, 교과서 수정 이례적 허용...'독도기술 늘리려 압박'(4/25, 연합뉴스)

- 도쿄신문은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다룬 내용에 대해서는 교과서 검정 신청 이후에도 출판사가 관련 내용을 변경 및 보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례적인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 신문에 따르면, 문부성은 올해 1월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고려해 출판사가 교과서 편집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 설명했다. 이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많이 신고자 출판사를 압박하는 것이라 분석했음.
- 보통 검정 신청 후 내용 변경의 허용은 명백한 실추에 한정돼 있지만, 이와 같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인해 출판사는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의중을 헤아려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다룬 내용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평가했음.



라. 미중 관계

● 美태평양군사령관 "中, 美군사기밀 해킹 계속할 듯"(4/21, 연합뉴스)

- 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군 사령관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사이버 능력 신장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미국의 기밀 탈취에 가장 효과적"이라 말했다고 FP가 18일 전했다.
- FP는 "중국 해커들이 F-35 전투기, 블랙호크, 이지스 탄도미사일 시스템 등의 설계 자료를 훔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으며, 라클리어 사령관은 "중국에의 자제 요청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미국 스스로 보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국간의 사이버전 문제는 최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에서의 쟁점 중 하나였으며, 미국은 2016년 말까지 사이버전 전담 인력을 현재보다 3배 많은 6천명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중국은 미 정부의 이런 구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 중국 "우다웨이 방미로 미중간 이견 줄어들어"(4/21, 연합뉴스)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미 성과에 대해 "양국의 공통인식은 확대되고 이견은 축소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음.
- 친 대변인은 "미국과 6자회담 및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등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회담을 진행했다"면서 "미국 및 다른 당사국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화해와 대화 촉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양국 수석대표는 지난 14~18일까지 뉴욕과 워싱턴에서 3번의 회동에서 6자회담 재개 조건 및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건인 현 상황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지는 않다는 관측임.

● 중국, 오바마 국빈 방일에 우려 속 촉각(4/22, 연합뉴스)

- 중국 관영 언론들은 22일, 오바마 대통령이 영토 및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일본을 국빈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비판적인 시각이 담긴 보도를 통해 당국의 불편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인민일보는 '오바마의 아시아 방문이 소방수가 될 것이냐, 선동자가 될 것이냐란 칼럼을 게재,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일 간 영토 분쟁지역인 센카쿠 문제와 방공식별구역 등과 관련해 일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큰 데 대한 반감의 표현으로 해석됨.
- 이밖에도 환구시보는 '초조한 도쿄가 오바마를 기다린다'는 기사를 통해 오바마의 방문을 준비하는 일본의 속내를 비판적으로 소개했고, 차이나



데일리는 "일본은 미국을 군사적 독립 가속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일본의 속내를 지적했음.

● 리커창, 미국에 "첨단기술 수출제한 완화" 촉구(4/25, 연합뉴스)

- 24일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베이징에서 미국 하원의 에릭 캔터 공화당 원내대표 일행을 만나 미국 측에 "첨단기술 분야의 대중 수출제한 조치 완화를 촉구하고 중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이어 리 총리는 "중미 간에는 상호보완성이 매우 크고 협력의 잠재력도 거대하기 때문에 갈등보다는 공동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고, 캔터 원내대표는 "미국의 미래는 아태지역뿐만 아니라 미중관계의 발전 및 강화와 관련이 깊다"고 말했음.
- 또한 리 총리는 "평화발전의 길을 가겠다는 중국의 결심은 확고부동하지만 국가주권과 영토안정을 수호하려는 의지 또한 흔들릴 수 없다"고 밝혀 남중국해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전했다.

마. 미·일 관계

● 미·일 TPP 타결 끝내 불발...관계 복원 새 걸림돌(4/25, 연합뉴스)

- 미일 양국은 24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25일 아침까지 각료급 협상에 이어 실무 협의를 계속했으나 돼지고기 등의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 관세 등을 놓고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둘러싼 원칙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음.
-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TPP 담당상은 "진척은 있었지만, 원칙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며, TPP 협상을 주도하는 미일 양국간 교섭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TPP 전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국민 방일과 미일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TPP 교섭에서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미일 관계 복원과 개선에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 美日 공동성명 채택...센카쿠 안보조약 적용대상(4/25,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은 25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으로 명기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방위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
- 공동성명은 당초 24일 열린 정상회담 직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난항으로 하루 늦어졌으며, 미일 정상이 센카쿠를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공동성명은 또한 "미일동맹은 글로벌 협력의 기반"이라 강조하고,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을 "미국은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양국은 미일 안보동맹을 강화해 지역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 아베 총리는 센카쿠에 대한 미국의 방위의무와 집단자위권 추진 지지가 명기된 공동성명에 대해 '획기적인 성명'이라 평가했고 이는 "미일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는 점을 국내외에 분명히 알릴 수 있는 성명"이라 강조했다.

● 아베, 센카쿠 문제 '성과'...미일 신뢰회복은 '아직'(4/25, 연합뉴스)

- 이번 회담을 일본 측 시각에서 보면 "받을 것은 받았지만 '줄 것은 상대편 장부에 달아놓은 상태"로 정리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은 TPP 타결을 위해 철저히 실무적인 자세로 일관해 일본의 의도에 말려 들지 않았다는 게 일본 언론의 대체적 평가임.
-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가 가장 원하던 센카쿠, 집단 자위권과 관련된 안보 분야에서의 '선물'을 줬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TPP와 관련한 합의 없이 '빈 손'으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은 앞으로 아베 정권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이는 TPP를 11월 중간선거 호재로 활용하려는 오바마 행정부가 "안보에서 원하는 것을 해줬으니 TPP에서 양보하라"며 일본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향후 미일관계는 TPP 협상에서 양국이 접점을 찾을지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임.

바. 마러 관계

● 미·러 외교 제네바합의 두고 서로 "이행해라" 대립(4/22, 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 외교수장은 21일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상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이번 사태의 긴장완화를 위한 제네바 합의와 관련해 서로 상대 진영에 성실한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대립했음.
- 러시아는 "미국이 키예프에 영향력을 행사해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유혈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현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제네바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라"고 요구했고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헌논의와 범국민 대화를 촉구했음.
- 반면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정부는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가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행 불가시 러시아에 대한 봉쇄정책 전개를 시사했음.



● **美, 러시아에 냉전식 봉쇄전략 부활 추진(4/24, 연합뉴스)**

-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직접 개입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대가를, 장기적으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고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냉전시대의 봉쇄전략 부활을 추진 중에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 보도했음.
- 이 전략은 푸틴 대통령의 장악력을 정치, 경제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러시아 이외의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시키자는 것이지만, 냉전시대와는 달리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크게 증가했고 정치권력은 분산돼 현실적 제약이 많을 것이라고 FT는 지적했음.
- 오바마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도 "러시아가 세계경제에 더욱 통합됐기 때문에 표적 제재가 '불균등한 효과'를 낼 것"이라 말했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한 유엔 전체회의에서 인도와 남아공은 기권을 하는 등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 고립은 어려울 전망이다.

사. 중일 관계

● **중국 "야스쿠니, 일본 마이너스 자산"…집단참배 성토(4/22,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22일,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146명이 야스쿠니 신사 집단참배에 대해 "불행하게도 하룻밤 사이에 (일본의) 마이너스자산(부채)이 더욱 무거워졌다"고 성토했음.
-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야스쿠니 문제는 일본과 주변국 관계를 훼손하는 요소이며 일본 스스로에게도 마이너스 자산(부채)"이라면서 "만약 일본 지도자가 고집스럽게 이것을 짊어지고 나간다면 이 마이너스 자산은 점점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했음.
- 앞서 중국 정부는 전날 아베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에 공물을 보낸 것에 대해 "일본 지도자의 야스쿠니 공물 봉납과 관료들의 참배는 일본 내각이 역사를 잘못보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비판하고 "이미 일본에 항의하고 우리의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음.

● **中대사 "日, 댜오위다오를 군비확장 핑계로 삼아"(4/22, 연합뉴스)**

-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24일, 서울대의 초청강연에서 중·일 간 영토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관련 "문제는 일본 정부가 댜오위다오 문제를 자국 군비확장의 핑계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일본이 먼저 과거의 평화적인 태세를 깬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정당한 영토와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며,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띄우며 중국 위협론을 제기"했다고 전했음.
- 추 대사는 댜오위다오 및 방공식별문제 등에 대해 상당시간을 들여 설



명하고 일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다만 "중국 정부는 충분한 인내심을 갖고 있고, 일본도 댜오위다오 지역에서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양국간 충돌은 없을 것이라 덧붙였음.

- **중국, 미일정상 '센카쿠 안보적용 대상' 확인에 반발(4/24, 연합뉴스)**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가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엄중한 입장을 밝혔으며, "중국의 댜오위다오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 된다"고 말했음.
 - 또한 "소위 미일 안보조약은 냉전시기의 산물로서 그것은 제3자를 겨냥할 수 없고, 중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하며 "댜오위다오가 중국 고유의 영토에 속해 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앞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센카쿠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미일 동맹과 지역 안보 방위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음.

아. 알려 관계

- **러시아 군용기 일본 근접 비행은 '경고' 메시지(4/21, 연합뉴스)**
 - 러시아가 최근 일본에 근접한 동해상에 군용기를 자주 출격시킨 것은 한반도 정찰활동의 강화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중단한 일본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뜻도 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이는 아니톨리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부 차관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일·러는 지난해 양국 국경 인근 지역에서의 전투기 등으로 야기될 군사충돌 위험 방지를 위해 비상연락과 협의채널 구축의 내용을 담은 '위협 군사활동 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 이 협상은 일본이 먼저 제안해 시작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대(對) 러시아 제재가 본격화한 지난달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단했으며, 안토노프 차관은 "일본이 서방과 연대하려고 양국의 안보 이익에 손해가 되는 조치를 취했다"며 유감을 표시했음.

자. 기타

- **사이버 스파이행위 5분의 1 러시아권이 차지(4/23, 연합뉴스)**
 -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22일(현지시간), 전 세계 사이버 스파이 행위의 20%가 러시아와 러시아어권 동유럽 해커가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 이는 중국이 사이버 스파이 행위의 96%를 차지했다는 지난해 조사와는 사뭇 대조를 보이고 있음.



- 이처럼 러시아와 동유럽의 비중 증가는 탐지기술의 발달로 과거 적발되지 않은 행위가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스파이 행위의 87%가 정부와 연계된 그룹에 의해 저질러진 만큼 미국은 동유럽 해커들과 러시아 정부와의 연계 정도를 파악 중에 있음.
- 또한, 중국과 북한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체 사이버 스파이 행위의 49%를 차지하며 가장 왕성한 정보 탈취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여전히 적발되지 않은 러시아의 정보 탈취 행위가 반영되지 않아 왜곡된 수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FP는 전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유치는 "체제대결 선전포고"(4/21, 연합뉴스)**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1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 문제와 관련, "체제 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음.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사와의 문답에서 최근 외교부가 북한인권사무소의 국내 유치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한 정치적 도발이며 대결광기의 극치"라고 비난함.
 - 또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에 "우리를 반대하는 인권모략의 국제적 거점을 저들 땅에 만들어놓고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이며 특히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직접 겨냥한 극악한 도발 광란을 일층 강화해보려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 **北,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는 "반인권 범죄자" 비난(4/22, 연합뉴스)**
 - 북한은 22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마이클 커비 위원장의 성정체성까지 문제삼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강하게 비난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커비 패당이야말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 의도적으로 자주적인 주권국가의 영상(이미지)을 훼손시킨 죄악만으로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충분한 극악한 반인권범죄자들"이라고 밝혔음.
 - 커비 위원장이 "40여 년간 동성연애로 추문을 남겼다"며 "이른바 법관의 감투를 쓰고 한 짓이 있다면 자기나라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동성결혼의 법화를 위해서 미쳐돌아간 것뿐"이라고 매도했음.
 - 또한 다른 COI 위원들에 대해서도 "자기 조국과 민족을 정치도덕적으로 배반하는 데 앞장선 자들", "다른 나라와 지역 문제들에 개입해서는 미국 등 서방나라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사회적 불안과 긴장만을 조성해온 범죄자들"이라며 거칠게 비난하면서, COI가 지난 2월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도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인간추물들의 비열한 조작품"으로 폄하함.

- **北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南 설치에 용납 못 할 도전"(4/23, 연합뉴스)**
 - 북한의 노동신문은 23일 '정세 파국을 몰아오는 분별없는 망동'이라는 글에서 남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도발'이라고 거듭 비난함.



- 또 남한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유치하려는 목적에 대해 "있지도 않은 '북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널리 여론화하면서 반공화국 적대인식을 극구 고취하고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인권모략 공조를 일층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함.
 - 이어 "인권모략 소동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망상을 이루기 위한 매우 불순한 책동으로 북남 사이의 불신과 체제대결을 격화시켜 종당에는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강조함.
- **"北당국, 해산서 탈북자 가족 수십 세대 강제 추방"(4/23, 데일리NK)**
-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국경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검열을 진행하면서 한국으로 탈북한 가족들을 최근 타 지역으로 강제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1차로 탈북자 가족으로 확인된 세대들을 추방하고 2차는 밀수를 하거나 해외(한국)와 통화한 주민들에 대한 추방이 이뤄진다. 때문에 주민들은 검열대상에 오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음.
 - 양강도 해산 소식통은 "보안서에서는 추방 세대들의 이사에 차 사업소와 기관 기업소들의 화물자동차를 대거 동원했다"면서 "이사에 동원된 운전수(기사)들도 '어디로 가는지는 출발하면서 보안서가 알려주게 되어 있어 일단 떠나야 지역을 알 수 있다'고 말해 추방 지역이 정확히 어딘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함.
 -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차 추방 대상으로 밀수, 중국이나 한국과 통화한 주민들을 명단에 올렸는데, "추방대상에 오른 주민들은 '중국과 전화하든 다른(한국) 곳에 하든 조국을 버리지 않고 이곳에서 살겠다고 하는데 왜 추방을 당해야 하는가'라며 보안원들에게 항의를 했고 보안원들이 이들에게 주먹질을 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지적함.
- **北, 유엔 北인권사무소 유치 움직임 연일 비난(4/24,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논평에서 "유엔 북 인권사무소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려 흥계를 드러낸 것은 북남관계의 총체적 파국을 기정사실화한 분별없는 망동"이라고 거듭 비난함.
 - 중앙통신은 "남조선의 이전 정권들도 유엔 북 인권사무소를 남조선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선임자들을 능가하는 극히 무모한 동족 적대행위"라고 주장했음.
- **美 "미국인 관광객 北억류' 스웨덴대사관 접촉중"(4/23, 연합뉴스)**
- 북한이 미국인 관광객 1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25일(현지시간)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힘.
 - 쟈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물론 우리(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권자가 북한에 억류됐다는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 현지에서 공유할 추가 정보는 없으며 이번 보도와 관련해 스웨덴 대사



관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북한은 이날 미국인 관광객 밀러 매슈 토드(24)씨를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면서 입국 검사 과정에 망동을 부린 미국 공민 밀러 매슈 토드를 억류했다"며 "그는 '망명을 하겠다고 고아대며(떠들어대며) 우리의 법질서를 난폭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 미국 정부는 또 북한에 수감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의 석방 문제를 교섭하기 위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파견 제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 **"北보안당국, '밀수·송금 작업' 역적행위로 처벌"(4/27, 데일리NK)**

- 최근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국경검열에서 탈북자 가족들의 송금 작업을 한 주민들과 국가기밀 등의 문건들을 국외로 빼돌린 밀수꾼들을 체포하면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역적행위로 간주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 양강도 소식통은 27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최근 그쪽(한국)에서 보낸 돈 작업을 한 주민들과 밀수 짐 속에 책자 등을 넣어 보낸 밀수꾼들이 체포되면서 보안서 통제가 강화됐다"면서 "이와 관련 여맹과 인민반 회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 소식통에 의하면 보안당국은 밀수꾼들의 작업 일정을 사전에 파악, 불시에 현장을 덮쳐 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밀수꾼들의 집에서 '정치적인 책자'를 비롯해 군부대 기밀문건 등이 발견돼 보안당국이 발각 뒤집혔음.
- 소식통은 '검열과 단속은 처음 있는 것이 아니어서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밀수 자체를 역적행위로 본다면 문제가 다르다'면서 주민들이 은근히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또한 인민반에서 "반장들은 '밀수를 통해 국가비밀이 새나가고 있는 현상들이 최근 많이 적발됐다며 '잡혀서 가슴 치며 한탄하지 말고 나라에 배은망덕한 죄를 짓지 말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여맹에서도 이런 내용의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인권

● **킹 美특사 "北인권문제 해결 '특효약' 없어"(4/23,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2일(현지시간) 미 국제법학회(ASIL)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문제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특효약(silver bullet)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모든 국제사회 당사자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을 촉구함.



- 그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매우 크고 복잡하다"면서 "단순히 국제형 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거나 중국이 나서도록 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음.

● 美북한인권단체 "北인권, 안보리 공식의제 만들어야"(4/23, 연합뉴스)

-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C)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3일 "북한 인권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
- 그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끊임없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우리가 계속 노력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이미 북핵·미사일에 대해서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는 만큼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중국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북한이 만약 4차 핵실험을 한다면 북중관계는 레드라인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위성국이자 지렛대, 한미와의 완충지대인 북한을 포기할 리 없지만 북한이 레드라인에 근접하는 행동을 한다면 중국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관측함.
- 또한 장성택 처형을 전후로 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모든 측면에서 악화됐다"면서 "국경 지역에 감시카메라가 더 많이 설치되는 등 탈북민 단속이 강화됐고 북한 정권이 본격적 숙청을 단행하면서 많이 악화됐다"고 지적함.

● 휴먼라이츠워치 '오바마, 한일 순방서 북한 반인도 범죄 거론해야'(4/24, 미국의 소리)

-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지난 달 28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22일 공개함.
-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 서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 중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동전략을 마련하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유엔의 새로운 노력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함.
-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유엔 사무총장에게 임시 특별법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검토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 공식 의제로 채택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23일자 사설에서, 유엔 안보리가 오랜 무관심 끝에 마침내 북한의 반인도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고 밝혔음.

● 올해 '북한자유주간' 행사 27일부터 열려(4/27, 연합뉴스)

- 북한인권단체들이 주최하는 제11회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개최됨.
- 행사 기간에는 북한인권 사진·그림전시회,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서명운동, 대북전단 살포, 콘서트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임.



3. 탈북자

● 남북하나재단, 탈북자 법률지원 대폭 확대(4/23, 데일리NK)

-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별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3일 서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착한(着韓)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탈북자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실생활에서 당면하는 여러 법률적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음.
- 기존에도 재단 종합상담센터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접근이 어려웠고 시간적 제약도 있어 전국적으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펼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탈북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대폭 확대함.
-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지원 ▲법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임.

●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4/25,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7부(김홍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우성(34)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 원을 선고했음.
-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사기죄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지만, 검찰이 해당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형량은 1심보다 가중되지 않았음.
-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천5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점, 동생까지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기소돼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음.
- 재판부가 이 사건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27)씨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법한 절차 없이 진술조서가 작성됐다고 봤음.
- 재판부는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함.
- 또한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그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됐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5. 납북자

- 오바마 "두딸가진 부모입장으로 北납치 용납못해"(4/24,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일본을 국빈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4일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의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이 아니라 두 딸을 가진 부모 입장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오바마 대통령은 도쿄도(東京都) 영빈관에서 열린 미·일 공동기자회견 직후 약 10분간 요코타 메구미(실종 당시 13세)의 아버지 시게루(滋·81)씨와 어머니 사키에(早紀江·78)씨, 다구치 아에코(田中八重子·여·납치 당시 22세)의 오빠인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76) 씨를 비공개로 만나 "일본 정부와 협력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음.
 - 이 자리에는 아베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납치문제 담당상이 함께 했음.
 - 시게루 씨 등은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납치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연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음.

6. 국군포로

-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4/23, 코나스넷)
 - 귀환국군용사회 주최로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가 개최됨.
 - 귀환국군용사회 유영복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귀환한 국군포로들에 대한 애환을 밝히고, 국군 용사들의 송환에 대한 당위성과 필연성을 제기함.
 - 이날 행사는 세미나와 귀환국군용사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포로수용소에서의 감시와 통제, 사회적 차별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던 심각한 북한 인권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전달함.
 - 정재호 국군포로·납북자정착지원센터 센터장은 '귀환국군용사의 현황과 지원정책'이란 주제발표에서 "국군포로 문제는 국제법상 전쟁이 종결된 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이행하지 않



은 채 국군포로가 아니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에게 조속히 국군포로 본국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함.

7. 대북지원

● 유진벨 재단, 결핵약 전달 위해 방북(4/22, 연합뉴스)

-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유진벨 재단' 대표단이 결핵약 지원을 위해 22일 인세반 회장과 재외동포·외국인 후원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방북 대표단이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편을 통해 평양에 들어갔다고 밝힘.
- 앞서 유진벨 재단은 지난 2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평안남·북도와 남포시 등에 있는 다제내성 결핵센터 12곳에 지원할 7억원 상당의 다제내성결핵약을 북한에 보냈음.
- 대표단은 앞으로 3주간 각 결핵센터를 돌면서 결핵약을 직접 전달하고 환자들의 치료경과를 확인할 예정임.

● 통일부, 어린이 의약품 대북지원 승인(4/24, 연합뉴스)

- 통일부는 24일 민간단체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대북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함.
- 이 단체는 해열제와 진통제, 감기약, 수액 등 의약품 7천500만원어치를 평양의 어린이 병원에 보낼 계획임.
- 이에 따라 올들어 정부가 승인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총액 기준)은 20억2천500만원 규모로 증가했음.

● 스웨덴 적십자사, 대북 사업에 50만 유로 지원(4/24, 미국의 소리)

- 스웨덴 적십자사가 북한 지원 사업을 위해 50만 유로, 미화 69만 달러를 평안남도 지역의 재난관리와 식량안보 사업에 투입할 예정임.
- 국제적십자사(IFRC)는 23일 스웨덴적십자사와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 자금으로 앞으로 3년 간 평안남도 북창군과 운산군 지역에서 재난관리와 식량안보 사업을 벌인다고 밝힘.
- 이 사업에는 덴마크와 핀란드, 노르웨이 적십자사가 지원한 자금과 이번 스웨덴 적십자사가 지원한 50만 유로를 포함한 74만 유로, 미화 102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임.
- 스웨덴 적십자사의 니나 펄슨(Nina Paulsen) 북한 담당 국장은 북창군과 운산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특히 심하다며, 지역 주민들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작물을 심어 주민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함.
- 국제적십자사와 스웨덴적십자사는 취약지역에서 침식이나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무와 유실수를 심고, 홍수로 집이 파괴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제방을 쌓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주민들이 빠른 시간 안에 대피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체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 영양 강화 사업으로는 유실수에서 열린 과일을 통해 주민들이 필요한 주요 영양소와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야채를 재배할 수 있는 온실을 지어 주민들이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스위스개발협력청, 북한에 분유 6백t 추가 지원(4/24, 미국의 소리)**

- 스위스개발협력청이 미화 380만 달러 상당, 총 600t 규모의 분유를 북한에 지원해, 5월 중 분유를 선적하여 7월 북한에 도착할 예정임.
- 스위스개발협력청의 손자 이셀라(Sonja Isella) 대변인은 이번에 제공되는 분유는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서 운영하는 영양과자 공장과 '수퍼시리얼'로 불리는 '혼합기공식품'공장에 보내져 영양식품을 만드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힘.

● **"北 인권·핵 문제에 식량구호도 중단 위기"(4/25, 연합뉴스)**

- AP통신이 입수한 세계식량계획(WFP) 내부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WFP는 현재 재정난 탓에 6월을 넘어서는 북한 주민을 위한 주요 식량 생산을 사실상 중단해야 할 상태임.
- 이에 따라 WFP는 북한의 인권탄압 및 핵 문제가 격화하면서 북한 식량 구호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부가 대거 줄어 큰 지원 차질이 예상된다고 경고함.
- 북한 주민을 위한 고영양 비스킷을 생산하는 WFP의 현지 공장 7곳 중 5곳은 지난달 폐쇄되었으며, 이미 북한 농촌 지역의 학생 50만여 명에 대해 식량 지원을 중단했고 다른 100만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곧 지원을 끊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음.
- WFP는 애초 작년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24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 하는 사업안을 짰으나 기금 부족 탓에 사업 지원 대상을 163만 명으로 줄였음.

8. 북한동향

- 北 「조평통」 대변인, 4.21 「중통」 대답을 통해 우리 정부의 유엔(북인권사무소) 국내 유치 움직임에 대해 "우리(北) 인민과 제도를 모독하고 우롱하는 특대형 도발, 체제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위협(4.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를 반대하는 인권모략의 국제적 거점을 만들어 놓고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리며 특히,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직접 겨냥한 극악한 도발광란을 일층 강화해보려는 목적임.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 관련 '남한 사회에 北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고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해치는 동시에 반정부 투쟁을 중북으로 탄압하기 위한 구실'이라며 '집권자 책임, 反국정원 투쟁' 선동(4.21,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모략의 소굴을 당장 해체해야 한다)
- 마이클 커비(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의 기자회견(4.17, 국제사회가 즉각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나설 것 등)은 "모략 날조품에 신빙성을 부여했다"고 배격 및 '단단히 결산할 것'이라고 강조(4.22, 중앙통신 논평)
- 우리 정부가 유엔 北인권사무소 유치 의사를 밝힌 것 관련 '인권모략 기구를 남조선에 들여앉히고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더 한층 확대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왜곡하며 '체제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가장 무자비하고 단호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 및 '인권소동' 중단 촉구(4.22, 평양방송/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으로 얻을 것은 수치와 파멸뿐)
- 우리 정부의 유엔 '북인권사무소' 유치 움직임에 대해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며 남북관계를 더욱 엄중한 사태로 몰아가는 극도의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4.23,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정세파국을 몰아오는 분별없는 망동)
 - * '南당국은 비방·중상의 중지'에 관한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를 유린하고 짓밟은 장본인이며 비방·중상의 맨 앞장에는 남조선집권자가 서 있다'며 '南당국은 우리를 걸고드는 도발적 망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4.23, 중앙통신·노동신문/동족을 헐뜯고 시비·중상하는 악습을 버려야 한다)
- 우리 정부의 유엔 [북인권사무소] 국내 유치 움직임에 대해 "북남관계의 총체적파국을 기정사실화한 분별없는 망동"이라고 연일 비난 공세 및 '남한 당국의 北 인권놀음 중단' 주장(4.24, 중앙통신 논평/반공화국 인권공조를 위한 분별없는 망동)
 - * 김봉희(평양시 피복공업관리국 문수옷공장 지배인)·정인철(평양시 서성구역 인민위원회 과장), "현 괴뢰패당은 대결미치광이,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 것" 등 '적개심 표출' 반향(4.24, 평양방송)